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2011. 2



##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2011. 2

---

황병덕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미·중 정상회담 배경 .....	3
1. 역대 미·중 정상회담 개요 .....	3
2.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갈등적 협력 .....	7
3. 1·19 미·중 정상회담 배경 .....	11
III. 미·중 양국의 기본입장 .....	16
1. 미국 .....	16
2. 중국 .....	19
IV.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23
1. 양자관계 개선 .....	23
2. 한반도 문제 .....	27
3. 글로벌 이슈 협력 .....	29

V.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	31
1. 미·중 정상회담의 성격 .....	31
2. 해외 언론의 평가 .....	33
3.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	36
VI.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	43
1.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43
2. 한반도에 주는 영향 .....	45
VII. 미·중관계의 전망 .....	52
1. 미국의 대중(對中)전략: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와 도전적 기회의 병행 .....	52
2. 중국의 부상과 대미전략 .....	54
3. 미·중 세력경쟁으로 인한 동북아 및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 .....	56
<부록>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동성명 .....	61

## I. 문제제기

- 1979년 이후 진행된 중국의 급성장으로 동북아시아 강대국 간 세력 전이가 발생,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GDP는 5조 달러에 육박하고 미·중 간 교역량은 연간 4천억 달러를 상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5%를 상회,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은 국제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체제 가시화
  
- 2011년 1월 18~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최초로 미국을 국빈 방문,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1개항의 공동성명문을 발표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1979년 1월 덩샤오핑 부주석이 방미하여, 미·중 간 국교를 수립한 이후 2010년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위안화절상 문제 등을 매개로 전략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관계에서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이벤트로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
  -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는 중국이 G2로 부상한 뒤에 이루어진 행사로서 향후 미·중관계 발전방향은 물론,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정세 판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금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 등 갈등사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평가하고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방향 및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전망을 목적으로 함.

## II. 미·중 정상회담 배경

### 1. 역대 미·중 정상회담 개요

#### ■ 리처드 닉슨 - 마오쩌둥 (1972.2.21~2.28, 중국)

- 미국은 국제세계에서 소련의 고립을 위해 60년대 말부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고, 중국은 60년대부터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1969년 중·소국경 문제로 무력충돌이 발생, 미국과 함께 소련 견제에 나서게 되었음.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최초로 1972년 2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미·중관계 3대 기본성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
  - 「상하이 공동성명」(1972.2.28)
    - : 미국이 최초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 「미·중수교 공동성명」(1979.1.1)
    - :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
  - 「8·17 공동성명」(1982.8.17)
    - :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한 ‘별도의 논의’ 약속

#### ■ 지미 카터 - 덩샤오핑 (1979.1.28~2.5, 미국)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한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로서 최초로 미국을 방문

- 덩샤오핑은 미국의 유명 회사를 시찰한 후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흑묘백묘론을 설파, 덩샤오핑의 방미로 미국의 지지 아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실시하는 전기 마련
  - 방미 기간 덩샤오핑의 소박한 모습은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크게 호전시킴.

■ 빌 클린턴 - 장쩌민 (1997.10.26~11.3, 미국)

- 미·중관계는 1989년 천안문 사태, 1993년 은하호 사건, 1995년 리덩후이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 등으로 상당 정도 악화,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미·중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전진적 개입정책(forward engagement)을 통하여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바탕으로 적대국 변화를 추구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군사적 봉쇄를 기본 축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민주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화평연변(和平然變)정책, 즉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개입과 봉쇄를 절충하는 성격(con-gagement)을 지닌 ‘유연한 봉쇄정책’을 추구
- 「중·미연합성명(中美聯合聲明)」에서 “양국은 협력 강화를 통해 21세기의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고 양국 정상급 회담의 정례화와 무역협조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였음.
  - 장쩌민이 취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는 데 기여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며 2개의 중국에도 반대하고 독립국 단위로 국제기구에 대만이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3불(不) 정책을 상하이에서 발표

■ 조지 W. 부시 - 장쩌민 (2002.2.21~2.22, 중국)

- 부시 행정부 초기에는 중국의 군사·경제적으로 부상에 따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소위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
-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대외정책 기조를 반테러 협력에 두면서 중국견제정책도 강도가 약화, 중국이 2001년 10월 21일 APEC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반테러 공동성명 채택에 참여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응할 것을 표명하고 부시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중국 장쩌민 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지역 강대국으로 존중할 것임을 천명
  - 중국도 미국 내 중국위협론을 잠재우고 종합 국력 증진을 위한 우호적 대미관계 증진 필요성 인식
- 미국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2002년 2월 방문하여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미·중관계가 개선되었음.
  - 백악관은 양국관계를 ‘건설적인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로 언급

■ 조지 W. 부시 - 후진타오 (2006.4.18~4.21, 미국)

- 집권 2기 부시 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명명하고 중국의 국력 증가에 상응하여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촉구
- 대중무역의 적자 증대에 따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통상압력을 강화하였고,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
- 부시-후진타오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 현안에 대한 문제의 인식 공유와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의미 있는 실질적 합의 도출에 실패
  - 국민 방문(state visit)에서 공식 방문(official visit)으로 방미성격 변경

■ 버락 오바마 - 후진타오 (2009.11.15~11.18, 중국)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위축과 미국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협조를 모색
  - 대중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과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미국내 여론 고조
- 2009년 오바마-후진타오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천명
  -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전 시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던 수단으로 썼던 4T(Tiananmen,

Tibet, Taiwan, Trade)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상호 존중  
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 하에서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에 합의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과 함께 시급한 세계적 도전에 대  
응할 강력한 동반자”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기간 모든 일정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공식  
일정(formal meetings)’으로 채워짐으로써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  
통령의 시간과 의제를 통제
  - 중국 방문 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국민과의 접촉이 중국정부에  
의하여 제한됨에 따라 미국에서 비판적 여론 형성
  
- 2009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는 미·중 양자 간, 지역적,  
전 세계적 수준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G2  
시대의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음.
  - 과학, 기술, 친환경에너지, 민간항공, 농업, 공공의료, 우주과학,  
문화·교육교류 등 일련의 양자 간 협의사항 포함
  -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
  - 대다수의 협의는 무산되었고, 2010년에는 양국 간 문제를 일으  
키는 이슈 증가

## 2.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갈등적 협력

- 21세기 진입 후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유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 과거 냉전 유산의 잔존에 따른 역내 국가 간 갈등과 대립
  - 미·중 패권 경쟁 및 중·일의 역내 주도권 경쟁

-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 중·대만의 갈등 및 역내 도서 영유권·해양 관할권 갈등
-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역내 국가 간 군사·안보적 측면의 대립·갈등, 경제적 측면의 협력·공조의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진행
- 2009년 미·중관계는 세계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립보다 협력 위주의 경향을 보임.
- 미·중관계에서 전통적인 양자 간 갈등요인이었던 인권, 티베트, 민주화 등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이슈들이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음.
- 중국은 2009년도 하반기 후진타오가 밝힌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견지하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추진하는 신외교정책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주변 지정학적 전략 거점을 구축하는 동북아전략을 추진
-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개도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미국과 대치하는 자세를 견지
-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미국은 2010년 초부터 전통적인 대중 견제 카드를 활용
- 오바마의 달라이 라마 면담
  - 미국의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결정으로 미·중 양국 간 군사교류의 중단
  - 구글 문제,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해킹 관련 문제로 양국 간 논쟁 격화

- 위안화의 저평가에 따른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우려
  - 대중 무역적자의 증가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외국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미국의 불만
- 2010년 미국이 중국 내 인권악화를 공개적으로 비판, 미·중관계 훼손
- 미국은 티베트와 위구르 인권에 대한 우려 및 후지아(2008년 안드레이 사하로프상 수상자)와 류샤오보(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감 등 중국내 반체제인사 탄압 문제제기
- 북한 핵 문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미·중 간 의견차 노정 및 대립구도 형성
- 미국은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핵개발 포기가 우선되어야 6자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중국은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 개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개선
-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중 간 안보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불신 확대
- 중국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제 조사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
  - 황해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
  - 연평도 포격에 대한 공식적 비난을 중국이 거절한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
  -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대북한 경고를 넘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경계심 표명

- 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양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행, 미국과 일본은 12월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 한국은 이 훈련에 사상 처음 참관국으로 참가
  - 중국은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
  
- 2010년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중·일 갈등의 심화 등 중국의 해양능력이 확대되면 말라카 해협 등의 해양수송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의 개입 등 남중국해 문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문제로 부상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으나,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대중국 견제에 나섬.
  
- 2010년 2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는 중국이 제1열도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의 연결선)을 넘어서 제2열도선(일본열도, 사이판, 괌의 연결선)으로 해양투사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
  - 미국이 2010년 8월 16일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중국이 인도양 및 제2열도선을 넘어서 서태평양까지 작전 행동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미·중 양국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국방 근대화 계획을 주시하고 미국의 국익과 동맹국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입장을 천명

-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부상은 인정하되,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2009년도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의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의 연장선상에서 실행되었음.
- 2010년 미국은 동북아 전략으로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 중국에 대한 헤징(hedging) 전략에 예년보다 더 강조점을 두면서 중국 포위압박을 본격적으로 수행

- 2010년 하반기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열도 문제에 대한 대립과 미·중 간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 대립 등 동북아는 한·미·일과 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적 구도가 강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3. 1·19 미·중 정상회담 배경

#### ■ 중국의 G2 부상 이후 미·중관계 재설정

- 2001년 반(反)테러전 이후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국은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크게 확대
  - 2008년 뉴욕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 쇠퇴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양상
- 미국이 반(反)테러전을 명분으로 아프간과 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 발효, 대만과 경제통합 진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에너지자원 확보차원에서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지역

으로 영향력을 확대

- 중국이 2009년 7월 1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S&ED) 이후 미국에게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위구르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sup>1)</sup> 중국과 관련국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중국 내 대외 강경정책 여론이 고조되었으며, 18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핵심 이익’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견지
  - 중국위협론을 배경으로 미국은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을 다각화
  
- 중국은 미국의 한국, 일본, 호주 등 기존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안보관계 강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과 군사협력관계 확대, 동남아국가연합과 ‘아세안+1’ 회의 개최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 등의 시도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우려
  -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투 병력을 철수하고 아프간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
  
- 미·중은 상호 전략적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G2시대에 쌍무 현안 및 글로벌 이슈를 협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음.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시키고, 미국은

---

1) 2010년 3월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베이더 백악관 아시아 담당 안보보좌관 방중 시,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추가하였음.

중국이 국제 이슈해결에 더 많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음.

### ■ 주요 양자 현안 협의

- 미·중 정상회담 직전 1월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량광레 국방부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중국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촉구
  -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과 국방정책 목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최근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사실을 공개하고 게이츠 방중 시 쟈-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미국을 위협
  
- 2010년 초 미국이 대만에 67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판매를 결정함으로써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 중요한 현안으로 다시 부각,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
  - 2012년 초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독립 여론이 고취될 수 있어 대만 문제가 미·중 간 갈등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동·서해에서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
  - 미·중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우라늄 농축 문제(UEP) 등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폭 확대와 경제회복 지연에 따라, 미국은 위안화 환율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확산
  - 미·중은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음.

#### ■ 글로벌 이슈 협력방안 모색

-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 설정과 규제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노정된바 있고, 지속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 협력방안 도출 필요성이 급변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이유 중 하나

#### ■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구

- 오바마 정부의 2010년 중간선거 패배와 경기침체로 2012년 재선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할 가능성
  -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7%의 미국인들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나쁜 일’이라고 여기고 있고, 53%가 미국이 무역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국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
- 중국은 고물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인한 향후 중국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
  - 후 주석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에도 일

정한 영향력 행사를 의도

- 장쩌민 계열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세력'에 맞서 후 주석이 세력을 형성하려면 집권 말기에 대미관계에서 대외적인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

### Ⅲ. 미·중 양국의 기본입장

-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0년을 지배했던 양국 간 갈등 분위기를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 기조를 강조
  - 양국 정부는 의견이 맞서는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제시

#### 1. 미국

- 미국은 2009년 중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간과 의제를 통제하고 일반 중국주민과의 접촉을 제한
-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시 공개석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진타오 주석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오바마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의 절반 정도를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진행하였고, 북한 문제와 인권 등 난제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할애
  -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도를 중지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 후진타오 주석이 동의
-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갈등적 이슈를 논의하되,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형식으로 향후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속성과 점진적 접근의 원칙하에 회담을 진행

-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 방미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대”와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경제무역연합위원회에서 미·중 간에 많은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찬사를 보냄.
  - 북한의 연평도 포격문제에 대하여 오바마 정부가 더 이상의 상황 악화가 없도록 중국이 북한을 제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과거 대립을 일삼았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간에 의견차이가 좁혀졌다고 언급
  
- 톰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논의 의제에 대하여 설명(1.14)
  - 전반적 관계: 기초, 목적, 향후 관계 설정(10~20년)
  - 안보·정치 문제
    - \* 북한 문제 -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key topic)로서 정권 제재, 도발 중단과 정상적인 외교의 틀로 복귀를 촉구하고 남북 간의 직접 대화 요구
    - \* 이란 핵 문제 - 중국의 안보리 제재결정 수용
    - \* 수단 문제 - 남수단 독립 총선거 문제
    - \* 미·중 군사대화 재개와 정례화
  - 경제 문제: 위안화 절상, 무역 역조 등
  - 특정한 국제적 문제: 류샤오보 문제, 인권 문제 등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1.14)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발표
  -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
  - 중국은 국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금융위기, 핵 문제, 테러리즘, 해적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미국과 함께 해야 하며,

-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서 투명성과 자금,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대한 조약을 이행해야 하고,
  - 중국은 우라늄 농축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 류사오보와 다른 많은 중국의 정치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
- 미·중 정상회담 직전 방중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상기시킨 데 이어 마이크 미 합참의장은 “공격위성, 공대함 미사일과 같은 중국의 군사 최첨단 기술은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 중국 무기의 미국 위협론을 처음으로 제기
-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언은 북한의 기술이 미 본토 타격 수준까지 근접했음을 중국에 알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하라는 의도를 내포
- 중국의 번영은 미국에 이득이 되고, 미국의 번영은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회견(1.12)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경제관련 입장을 제시
- 중국이 미국의 투자와 기술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얻으려 한다면, 중국 당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충분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을 요구
  - 개리 로크 미 상무장관(1.13)은 국제적 안정과 번영을 해치는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와 중국의 느슨한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이행 촉구

-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자 간의 향후 10년, 20년 간 전반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 안보 및 정치현안과 관련, 북한 문제를 최고 의제로 설정하는 한편 이란 핵 문제, 미·중 간 군사협력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 경제 문제와 관련, 위안화 절상,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기업의 중국진출 환경 조성 등을 의제로 준비
- 중국이 미국의 개입 자제를 요구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 요구 등에 대해 미국은 기존 입장 고수를 견지
- 미국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석방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함.
  -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없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 중국 체제의 민주화 개혁을 유도하려는 의도

## 2. 중국

- 2010년 미국과의 마찰로 중국의 안보적 위기가 초래되면서 경제발전엔 걸림돌로 작용,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중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였음.
- 국제 여론이 최근 중국 외교의 방향이 ‘돌돌핍인(咄咄逼人)<sup>2)</sup>’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는 배경 아래,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통하여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고 ‘소프트파워’를 부각시켜 미국

---

2) “기세등등하게 사람을 압박지르다”라는 의미

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하였음.

-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2011년 1월 18~21일 간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
  - 관영 신화통신과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 중귀칭넨바오(中國青年報) 등의 주요 언론매체들도 후 주석 집권기에 두 번째로 이뤄지는 방미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
  - 2010년 대만에의 무기판매와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 공방, 천안함 사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과 관련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으나 금년부터 대화와 협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논조
- 미·중 양국이 위안화 환율절상과 남중국해 영토분쟁, 북한 및 이란 핵 문제 등의 쟁점에서 팽팽한 대립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 주석의 방미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 편향적 노선을 걸어온 중국은 최근 북한의 잇단 평화 제스처를 들어 남한의 대화수용 촉구를 미국에 요구할 예정이었음.
  -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과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훈련, 대만에의 무기판매 문제 등 안보 문제와 관련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는 위기와 도전이 예상되며, 경제 분야의 쟁점인 위안화 환율 절상 공방을 예상

-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은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 직전 2011년 1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서면 답변에서 잘 나타나 있음.
  - 전략적인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화와 접촉 증대
  - 냉전시대와 같은 제로섬 사고방식 폐기
  - 양국은 각국의 주권, 영토의 보전, 발전 이익을 존중
  - 양국이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경주
  
- 중국의 정치 개혁이 경제 개혁의 보조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후 주석은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없으면 사회주의 현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언급
  - 정치 개혁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성숙되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민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야 함.
  - 법치에 근거하고, 중국의 상황에 맞추어 인민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임.
  
- 경제 문제와 관련 후 주석은 개방정책의 기본을 확고히 지켜갈 것이며, 해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안정적인 법과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관심사를 적절히 처리할 것임을 언급
  
- 국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후 주석은 평화발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하는 유일한 약속이며, 중국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정책과 5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

- 한반도 긴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 중국은 남북한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남북한 간 대화재개를 요구했음을 언급
  
-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해왔고,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을 통해 균형 잡힌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

## IV.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1월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 공동성명은 미·중 협력관계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 및 민간 분야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총 41개항으로 구성
  
- 양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군사교류, 글로벌 이슈,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수단의 평화적 분리, 기후변화 협약,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1. 양자관계 개선

#### 가. 미·중관계 강화

- 미·중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1세기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서로 정치제도와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신뢰를 배양·심화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세계가 미·중 패권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분수령으로서 미국은 중국의 번영을 환영하고, 중국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로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사실을 표명

#### 나. 대만 문제 기존원칙 재확인

- 중국이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맞물려 있으며 미국이 가지는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을 강조하였으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중·미 간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하는 데 그쳐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

#### 다. 양국 군사대화 확대

- 미·중 양국은 건전하고, 안정되며, 믿을 수 있는 양국 군사관계가 포괄적 미·중관계 공통인식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양국 군사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차원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대화와 소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양국 군사대화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국방부 방위업무 협의, 국방부 업무회의, 해상군사안보협의기구 가동 필요성 강조
- 미·중 양국은 우주 영역에 대한 대화와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투명하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우주 영역에서 실무협력의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을 계속하기로 동의

#### 라. 고위층 교류 및 인적 교류 촉진

- 미·중 양국은 강력한 미·중관계가 고위층 교류와 떨어질 수 없고, 밀접하고 빈번하며 심도 있는 대화가 양국관계 및 전 세계의 평화

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

- 미·중 전략, 경제 대화(S&ED) 지속 추진
- 미·중 인적교류 고위급회담 및 미·중무역연합위원회(JCCT) 개최
- 양국 외교부장관 상호방문과 회담 등의 방식을 통한 밀접한 소통 유지

○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미·중 간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서 더욱 광범위하고 심화된 인적 교류의 확대를 추진함.

- 중국 성장(省長)과 미국 주지사 포럼을 수립하고, 성과 시의 자매결연 관계 수립 등 양국 지방 급 교류와 협력 전개 확대
- 미국학생 중국 10만 명 유학 계획 실행을 통하여 양국 청년 간 대화와 교류를 강화

#### **마. 포괄적·호혜적 경제 동반자 관계의 수립**

○ 양국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존중하고 함께 번영하는 경제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국과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측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였음.

- 특히 미국은 중국의 달러 가치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기 연방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또한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에 경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
-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내수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위안화 환율의 구조 개혁의 촉진을 미국에 약속

- 양국은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포함되는 화폐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거래에 폭넓게 사용되는 화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하였음.
  - 이러한 미·중 합의로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 양국은 전 세계 금융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금융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하고, IMF와 다자개발은행(MDBs)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천명
  - 양국은 G20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모델을 지지하고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을 재차 강조
  - 개발도상국 원조, 빈곤퇴치 협력

#### **바. 중국 인권 관련 이견 노정**

-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양국이 인권 문제에서 중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미국은 “인권과 민주를 신장시키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반면, 중국은 “어떠한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이 난제라는 점을 노정하였음.

## 2. 한반도 문제

- 총 4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18조항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 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 등 크게 3부분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전면 이행하고, UEP 개발에 대해 우려하며, 6자회담 프로세스를 조기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반도 관련 내용(2011.1.19)> —

- 미국과 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 온 것에 주목했다.
-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에 동의했다.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 양측은 이 문제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런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3. 글로벌 이슈 협력

#### 가. 지역적·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원칙 천명

- 양국 정상은 양국이 아태지역과 기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이익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긴박한 지역적·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동의
  - 폭력과 극단주의에 적극 대응
  -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의 확산 방지 및 핵 안전 강화
  - 전염성 질병·기아 퇴치
  -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해적 격퇴 및 재해 예방, 사이버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 초국적 범죄 근절

#### 나. 핵 없는 세계 실현 노력

- 양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핵확산과 핵 공포주의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 양국은 「핵실험 전면금지 조약(CTBT)」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을 지지하고,
  -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일찍이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 이행 회담 지지
  - 양국은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이 핵 안전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중국에 핵 안보 시범센터를 건립한다는 양해 비망록에 공식 서명

#### 다.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

- 양국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는 확신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이고 장기적 방안 모색에 노력 경주
  - 양측은 UN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
  - 양측은 P5+1(안보리 5개국과 독일)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환영

#### 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분야 협력

-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현재 중요한 양대 문제라고 인식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에 동의하였고, 양국과 세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협조해 나갈 것에 합의
  - 기존의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시장개방 보증, 청정 자원영역에서의 호혜적 투자 촉진, 청정에너지 장려, 첨단 청정 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
- 양국 정상은 칸쿤 협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인식
  - 칸쿤 협의의 실시를 포함한 「UN 기후변화협약」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 V.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 1. 미·중 정상회담의 성격

- 브루킹스 연구소의 David Shambaugh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기고문(2011.1.18)에서 역대 미·중 정상회담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세계 변화적 회담(World Changing): 국제정치의 전반적 틀을 바꾸겠다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회담
    - 1972년 닉슨·마오쩌둥(중국) / 1979년 카터·덩샤오핑(미국)
  - 양자관계의 제도화 회담(B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협정체결을 통해서 양국 정부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회담
    - 1979년 카터·덩샤오핑(미국) / 1984년 레이건·덩샤오핑(중국) / 1997년 클린턴·장쩌민(미국)
  - 안정화 회담(Place Holding): 국내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접촉 유지와 양국관계 안정을 위한 회담
    - 1975년 포드·마오쩌둥(1975년 당시 미국은 워터게이트 후유증, 중국은 마오쩌둥 사후의 권력투쟁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양국의 국내정치 불안정)
  - 축제적 회담(Celebratory):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회담
    - 1989년 부시·덩샤오핑(중국) / 1998년 클린턴·장쩌민(중국) / 2006년 후진타오·부시(미국)
  - 위기관리 회담(Crisis Management): 양국 간 이견노정이 심각한 경우 위기관리 목적 회담
    - 1993년 클린턴·장쩌민(미국 시애틀) / 1997년 클린턴·장쩌민(미국, 국민방문) / 2001년 부시·장쩌민(중국 상하이) / 2002년 부시·장쩌민(중국, 국민방문)

-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담(Dashed Expectations)  
: 2009년 오바마·후진타오(중국)

○ 2011년 미·중 정상회담은 상기 6가지 회담의 유형 중에서 안정화, 위기관리 및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3가지 특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

- 안정화 회담의 성격
  - \* 2012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5세대 지도자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어 있는 중국 국내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 \*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에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기 대비 차원에서 안정적 양국관계의 연속성 유지 목적
- 위기관리 회담의 성격
  - \* 위안화 절상,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문제
  - \*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국의 경계활동 및 황해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과 같은 세력경쟁 문제
  - \* 북한, 이란, 남중국해 문제 등 패권갈등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축적되어 문제 해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위기관리 목적
- 기대 불충족 회담의 성격
  - \* 미국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보다 큰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
  - \* 중국은 미국의 인권 문제 및 경제적 자유화 요구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등 양국 간의 전략적 신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약속할 수 없음.

## 2. 해외 언론의 평가

-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중국 관영언론은 큰 의미를 부여

### 가. 미국

-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 국방력 증대, 대만 문제, 위안화 절상 문제, 인권 문제, 북한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
  - 후 주석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공개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언급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
-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무리늬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와 인권 문제를 인정한 사실을 들어 ‘미·중관계 진전의 작은 신호’라고 평가
  - 위안화 절상 문제와 대만 문제 등을 들며,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나 돌파구는 없었다”라고 회의적으로 평가
  - G2로 부상한 중국이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후 주석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중 기업 간 대거 계약 체결 등 경제 분야에서 유대가 강화되었으나, “중국 군사력 증대, 중국의 환율과 인권, 중국의 외국기업 차

별정책,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

- 로이터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오랜 쟁점인 무역, 안보 문제에 대해 주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자유무역, 위안화 절상, 인권개선 등을 촉구하는 강경발언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백악관 국민만찬장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후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

## 나. 중국

-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존중의 새 시대’를 선언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오른 중국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 방문으로 평가
  -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기간 중,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데 노력하자고 동의
  - 방미 중 중·미관계의 발전과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 그리고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은 긴밀히 연관
  - ‘상호존중과 호혜’는 중·미관계의 키워드일 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 기타 동반자들과의 공동 발전의 원칙
  - 중·미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관계는 아니고, 전략적인 의의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서 각계 인사와 교류한 것은 13억 중국

## 인들의 우의를 전달

- 신화통신은 양제츠 외교부장의 기고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미·중관계 방향 제시, 양국 상호 신뢰 증진, 경제협력의 진전, 인적 교류 및 이해 증진, 국제 문제에서의 대화와 협조 강화 등을 열거
- 중국 언론은 미·중관계가 대화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들어서게 됐다고 강조
  -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앞으로 중·미관계의 중요 방향을 계획하며 협력의 영역을 심화시키는 등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 CCTV는 중국이 450억 달러 규모 수입 패키지를 미국에 제시한 것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도(錢道)’ 유망하게 됐다고 평가
- 홍콩 평항타이(鳳凰臺)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이 수립하였음을 선포를 확인
  - 후진타오 주석이 확정지은 ‘중국과 미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는 가장 꾸밈없는 개념으로써, 중·미관계가 성숙화된 상징으로 평가

## 다. 북한 및 기타 국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월 22일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논평 없이 신속히 보도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음.

-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신문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올해의 중요한 지정학적인(geopolitic) 사건”이라 평가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정상회담 성과가 적지 않았으나 북한 정세나 인권 문제 등 초점이 된 과제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음을 지적

### 3.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 가. 미·중관계

##### ■ G2시대 개막 천명

- 중국의 부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강대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이고, 국제적 사건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는 중국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재차 미국이 천명하는 포괄적 문구를 통해서 중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였음.
  - 중국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로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양국의 세계적 및 지역적 지위를 상호 인정

## ■ 미국은 실리, 중국은 명분 획득

- 미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50억 달러 무역·투자 계약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기반을 둔 보잉 사로부터 2011년부터 19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중국과 체결
  - 미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서 중국의 부분적인 협조를 끌어낸 것도 중요한 소득으로 자평
  - 미국은 글로벌 이슈에서 G1으로서 도맡던 짐을 중국과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중국은 G2의 지위를 인정받음.
  - 중국은 세계 주요 이슈에서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국제정치적 입지 확보
  -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한계를 보여줌.

## ■ 미·중 양국 갈등완화 계기 마련

-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쌍무관계 강화와 지역안보 문제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긴장된 양국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
  -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은 미국이 아·태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미·중 갈등소지가 다소 완화

- 2011년 상반기 중국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미국 방문, 양국 국방협의회, 국방 실무회담, 해상군사안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하와이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연내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
  - 2011년 5월 워싱턴에서 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S&ED) 개최, 연내 제2차 인문 교류 고위급 협의와 제22차 통상무역합동위원회 개최 및 외무장관 상호 방문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로 함.
  
-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중 포위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미·중관계는 당분간 경쟁구도 속에서도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 금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도광양회’ 전략을 준수할 것임을 재천명했음.

#### ■ 중국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한 의미 부여

- 미국과 중국은 비록 인권 문제에서의 중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거듭 천명
  - 미국 측은 인권과 민주를 신장시키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 중국 측은 어떠한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인권에 대하여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하여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

#### ■ 호혜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 / 쟁점 사항 타결 실패

- 위안화 환율 절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했으나, 큰 틀에서 미·중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21세기 기회와 도전을 다루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은 개방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하고 무역·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민간투자 증진, 시장의 역할 확대와 함께 위안화 환율 개선 및 환율의 유동성 증진 등을 강조
  - 중국은 보잉기 200대 구매계약 체결 등 450억 달러 상당의 구매·투자를 약속
  
- 미·중은 금융·투자과 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에도 합의
  - 미·중은 IMF 특별인출권 바스켓 통화들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통화라는데 합의하고, 미국은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포함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
  
- 미·중은 기존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구조 개혁을 위한 협력에 공감하고, 국제경제와 금융 문제에서 G20의 역할을 지지한다는 데에도 합의함.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로 거론되어 왔던 환율과 관련, 미국의 집요한 공세에도 중국이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
  - 미국의 위안화 환율 인상 필요성 지적에,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 증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맞섬.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한 장문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갈등요소를 해소하는데 미흡,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야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격화될 여지
  - 중국이 4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동의,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완화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미·중 간 무역 불균형 근본적 문제의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잔존

#### 나. 한반도 문제

- 금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안보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이 중 한반도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다뤄졌음.

##### ■ 한반도 평화 유지 최소 공감대 형성

- 미·중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동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최근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에 긴장에 우려
  -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군사력 사용에 의하여 추구할 경우 중국과의 무력대결을 초래할 것을 우려
  - 중국 역시 자국의 국력 향상에 우호적 주변 환경 조성이 필수적 사항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현상유지 선호

## ■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 재확인

-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 미·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유지에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양국 정상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 및 6자회담 프로세스를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재확인하였음.

## ■ 북한 농축우라늄 문제 공동성명 문항 채택

- 한·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북핵 「9·19 공동성명」과 UN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이라는 사실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 표현 수위를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낮추어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냄.
  -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이를 북핵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중국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공동성명에 이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회담

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시아 미군 재배치를 통한 대북 선제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에 나서겠다고 말함으로써 실현

#### ■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원론적 절충

-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논평
-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나 구체적 해법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양국이 상대의 입장을 상호 고려하면서 원론적인 절충에 그친 것으로 평가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 원칙으로서 과거 ‘전략적 인내’ 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던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로 입장으로 선회
  - 북한의 농축우라늄 시설 공개로 미국은 북한 핵 정책을 대화 위주의 노선으로 선회
-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에 동의
- 미·중 정상회담 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은 미·중이 처한 국내외적 입장과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퇴진을 앞둔 후진타오 주석의 개인적 입장 등을 고려한 다층적 타협적 성격이 강함.

## VI.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 1.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불균형적 양극체제 본격 출범

- 냉전 시기 동북아 국제질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하였던 소련 및 중국이 서방과의 체제경쟁에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북방삼각 동맹은 약화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强) 구도로 재편
- 21세기 진입 후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초다강 구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극체제로 개편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관계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확인되었음.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미국 단일패권의 막을 내리고 세계가 미·중 패권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분수령(동아일보)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양극 신(新)질서의 시작으로 소련 해체 이후 20년에 이르는 미국 단극화 시대에서 양극체제로의 회귀이며, 중국이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의 한 극을 대신한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홍콩 평항타이(鳳凰臺))
  -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스푸트니크 순간(Sputnik moment)에 와 있다”고 발언하면서 소련이 1957년 미국에 앞서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소련을 대체하는 일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군사력 우위 및 신기술 개발 우위 등의 요인으로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
-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 현대화 등의 내재적 균형화 전략 추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다극화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등 소극적 형태의 한 극을 형성
  -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상당 부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가 아닌 준(準)진영적 양극 구도를 형성

#### 나. 동북아 긴장 완화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 본격적인 세력경쟁이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양국 협조에 의견 일치
- 세계경제 문제 관련, G2·G20 등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가 지구적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재확인된 것으로 추정
  - 미국과 중국 어떤 국가도 현실적으로 국제체제의 독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상호 인정
  - 미·중 양국이 현안별로 경쟁과 갈등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 상대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국이 수용

## 2. 한반도에 주는 영향

### 가. 미·중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 미·중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합의에 이른 것은 한반도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 훼손 및 비핵화 문제인 것으로 이해됨.
- 중국은 이번 후 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른바 ‘힘의 외교’를 구사하는 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의지를 표명
  -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언급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냉전이 첨예한 시기 미·중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70년대 평풍외교 40주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서도 엿볼 수 있음.
  -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이 대응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
-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에 발맞춰 남북이 대화 재개 쪽으로 방향을 전개하고 있음.
  - 북한은 1월 20일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직후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논의를 포함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

### 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및 6자회담 개최 가능성 고조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중 양국은 북한 핵 문제 등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일부 진전된 입장을 보였음.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의 해상 사격훈련에 북한이 대응을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중 정상회담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는데 중국이 동의함.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
  -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급진전으로 전략적 인내를 통한 북한 비핵화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의 비확산으로 북한 핵 정책 방향 선회
- 미·중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점에서, 남북대화가 개최된 후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
- 미·중 정상의 이번 합의는 남북한 모두에게 남북대화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였고, 한국이 이를 수용함.
- 남북한 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제의할 것이며, 미국도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북한과 접촉을 갖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동조할 것으로 보임.
- 1월 26일 방한한 미국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정부와 조율한 결과,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6자회담 개최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를 설정

-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단계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본회담을 위한 의제를 조율하지 못할 경우 본회담이 무산될 가능성
  -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해야 된다는 입장
  - 북한은 종전대로 천안함 사건은 북한과 무관하고 연평도 사건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한 남측의 사격훈련에 대응이라며 남측과 기싸움을 전개할 가능성 농후
  - 북한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수용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상존
  
-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성사되고 6자회담으로까지 간다고 해도 북한 핵 문제 해결까지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
  - 한·미·일 정부는 작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무장관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 전제조건 5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선제적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임.
  - 한·미·일 3국이 합의한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IAEA 사찰 수용, 「9·19 공동성명」 준수, 정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자유아시아방송』, 2010.12.17)

#### 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불투명

- 북한이 1월 20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곧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
  - 북한이 성의를 보여 남북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는 기대 난망
  - 한·미·일 3국은 북한이 과거에 저지른 계약위반 행위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이미 학습을 거쳤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 믿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북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간 견지한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 단계론’을 2009년부터 ‘평화협정체결 선행론’으로 전환
  - 미국은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 핵 비확산을 추진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중국과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

#### 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속

-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반도의 운명이 향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갈수록 미·중 양국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 될 가능성 제시
  - 미·중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타협은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하나의 좋지 못한 선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
  -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이 중국의 북한 꺼안기, 이로 인한 미·중 간 갈등 고조, 이어지는 미·중 간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도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될수록 한국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 향후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한국의 강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전향적인 해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 대두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지와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가 급속하게 미·중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미·중 간 타협의 결과에 따라 대화국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 강대국 간 협력과 경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문제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향후 더욱 절실해질 것임.
  - 미·중의 경쟁과 협력이 한반도에서 반복적으로 투영되는 환경을 최소화기 위해서도 미·중 대화국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마.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영향력 확대 입증**

- 중국의 대북 전략적 동맹관계는 미·중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차기 중국 지도자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 성격에 관련하여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

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2010.10.25)라는 언급은 중국의 대북 인식을 노정

-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의 의미를 2010년의 일련의 상황전개를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재인식

- 이번 정상회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은 미·중 간 타협 산물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남북대화 와 6자회담 재개가 최종 해법으로 관철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바. 미·중관계 악화로 인한 한반도 안정 훼손 가능성**

-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미·중 간 경합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투명성에 대해 미국은 계속 문제를 제기 할 것이고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미 해군 정찰과 관련된 신경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는 향후 동북아 정세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상이한 접근도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이나, 미·중 간 패권경합의 조기 가시화시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전략적 신뢰가 미흡한 미·중관계는 대만 무기수출 등 극히 작은 문제로도 악화될 수 있음.
  - 미·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치명적

타격

- 미·중 대립구도의 첨예화는 한국 내 친미, 북한 내 친중 진영 논리를 부활시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볼모로 전략케 할 가능성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의도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미국에 대응하려 할 것이므로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 2011년은 중·북 군사동맹조약 체결 60주년 해로 중·북 간 군사교류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2012년 중·북 모두 권력교체를 앞두고 지도부 간 인적 유대관계 강화조치가 있을 것임.

○ 북한은 핵 문제가 미궁에 빠지고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화공세에서 벗어나서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돌입할 수 있음.

○ 미국이 중국의 지위를 G2로 보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

- 한국은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대륙세력, 해양세력으로 대립되는 동북아 분단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동북아정책 구사
-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며, 상황에 맞게 실용외교를 전개할 필요

## VII. 미·중관계의 전망

### 1. 미국의 대중(對中)전략

#### :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와 도전적 기회의 병행

- 중국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 계기는 1970년대 미국의 대(對)소련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중 데탕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중국의 경제력은 2009년 기준으로 미국 경제력의 약 1/3 수준까지 향상되었음.
- 중국은 향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96년 이후 중국의 군사비는 두 자리 수 증가를 지속한 결과, 미국과 비교해 1/4 미만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로 부상
-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류보편적 가치의 부각 등 다양한 시도
  -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경제 자유화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여 중국이 보다 보편적인 규범을 준용하도록 유도
  - 중국의 양적 팽창 추세를 저지하기보다 중국 내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근본적 목표를 추구
-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군사·안보 구도에 있어 양자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중층적·복합적 다자 간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미국 우위의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안보 정책은 한·미 및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이 역내 갈등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관리
- 미국은 APEC 정상회담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sup>3)</sup>를 통해서 아태지역의 국제질서가 중국 위주로 편향되지 않도록 견제
-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를 통해 아태지역 7개 국가와 선택적 자유무역화를 추진<sup>4)</sup>

-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민주화 및 경제적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것임.
-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가 군사대국화 경향 및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간접적으로 순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할 것임.

---

3)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참여국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부터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양국의 가입으로 EAS는 회원국이 18개국으로 증대되었으며, 미·중, 일·러 및 인도를 포함하는 세계 정치·경제상의 주요 국가를 포함하게 되었음.

4) 환태평양파트너십은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아태지역 4개국이 연합하여 창설한 다자무역협정으로 2006년에 4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호주, 페루, 베트남과 함께 협상 참여를 결정하고 2011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의 기치 아래 상기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운영과 관련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G20 정상회의의 출범이 보여주듯이 세계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가들과 부담을 공유하고자 하는 현상변화적 전략을 구사할 것임.

## 2. 중국의 부상과 대미전략

- 중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경제 질서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 이전효과를 십분 이용하여 경제력 향상에 적극 이용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력 향상에 기반을 둔 국방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에 균형화전략(balancing)을 구사
  -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서는 다극화전략에 기반을 둔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을 도모
-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미국을 핵심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여부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이해
  - 중국은 최소 202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
  - 초강대국 미국은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식
  - 중국은 미국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소프트파워적 대외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중국의 부상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차원에서 대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결코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표명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패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견제
  
-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력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미국에 필적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 환경 등 개도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개도국 대 선진국의 구도를 만들며 미국과의 국제규범을 둘러싼 경쟁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미국과 국제규범 제정을 둘러싸고 신중한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역내 미국 중심의 양자 간 군사동맹체제를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제로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주변국들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경계를 완화시키면서 중국이 부상을 할 수 있는 우회적 공세전략일 가능성

### 3. 미·중 세력경쟁으로 인한 동북아 및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

- 현재 동북아 안보환경은 군비경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등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안보를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절대 안보를 추구하고 있음.
  - 동북아는 일초다극체제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해가는 역학구도 아래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
  
- 현재 대립과 협력을 거듭하고 있는 미·중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미·중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정상회담을 위해 조성된 현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정상회담 이후 돌발사건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 있음.
  - 미국·일본·EU 간의 전략적 모순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이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주로 안보 차원의 모순
  - 미국과 중국 간의 모순관계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의 경제, 동아시아 안보질서상의 안보, 중화주의와 미국식 예외주의의 충돌, 더욱이 급격한 세력 전이로 인한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패권적 갈등 등 5개 방면에 걸쳐 있는 중층적인 성격
  -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야말로 다른 국가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패권갈등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역내 미국중심 동맹체제의 강화, 9·11 이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 북한에 대한 압박,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견지 등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의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근본적인 전략적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 아니라 공세적 팽창주의 정책의 실시로 주변국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부상 이후에도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국제규범에 합당할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최근 중국이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패거리 지어 중국에 대응하고 중국 봉쇄를 도모하고, 역내 국가 간 관계를 도발해 이간질하고 근해에서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라며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표출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미·중 간 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여정(開創中美伙伴合作新局面之旅)’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향후 동북아 정세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두 정상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극단주의 대처, 초국적 범죄 대처, 전염병 및 기아 퇴치,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보안 강화, 인신매매 단속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에 도달
  - 이들 사안은 원래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이 아니어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

- 인권, 대만, 티베트 문제, 위안화 절상 문제, 북한 핵 문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양자 간 이슈 등 2010년 양국 간 갈등을 야기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봉합되거나 아니면 이견 노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방중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있던 ‘핵심이익(Core Interest)’이라는 단어가 이번 공동성명문에는 기술되지 않은 것은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

- 2009년 11월 채택된 미·중 공동성명에는 서론과 미·중관계 언급에 이은 ‘양국 전략적 신뢰 건립 및 심화’ 항목에 “양국이 모두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명시
- 중국은 2009년 11월 이전에는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대만과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을 거론했으나 지난해에는 여기에 남중국해와 서해까지 포함시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음.<sup>5)</sup>
- 미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에 핵심이익이

---

5) 중국은 2010년 초부터 난사군도(南沙群島)와 시사군도(西沙群島)를 축으로 한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사실상 주장하면서 같은 해 7월에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치, 그러나 중국은 그에 맞서 미국이 베트남과의 군사훈련에 이어 핵 협력 의지까지 비치는 ‘안보 카드’를 들이밀자 중국은 대치 두 달여 만에 스스로 후퇴하였고, 서해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난해 내내 서해(중국명 황해)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미 항공모함의 진입을 불허한다며 미국과 맞섰지만,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이 강행되면서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이뤄졌고 ‘불가’ 목소리를 높이던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음.

라는 문구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 관찰시켰음.

-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수사를 통한 비전제시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향후 세계질서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지 않음.
  - 양국 정상 공히 일정 정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타협
  - 2012년 퇴임을 앞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넘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리더십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정치적 동기 내재
  - 오바마 대통령 또한 재선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의 일정한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 경제회복에 일조했다는 성과가 필요
  
- 미·중 정상 간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이들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면서 언제든지 미·중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상회담 직후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동남아시아에 미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대(對)중국 선제적 억제책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미·중 간에는 전략적 신뢰가 결핍되었음을 의미
  
- 동북아 국제질서는 중국이 국방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서 신무기 개발, 미군 군사력 재배

치,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아시아형 나토 결성과 같은 소(小)다자주의를 추구하면서 동북아 질서는 신냉전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상존

- 2010년 말 전후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
-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향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하면서 개발을 중단했던 신형 장거리 핵 폭격기, 신형 미사일 전자방해 장비, 통합공격전투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시사

○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강화됨에 따라 세력 전이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증대될 가능성

-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 미·중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은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나, 전략적 신뢰의 부족으로 안정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내포

-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로 변화·발전
- 미·중관계는 상호의존성 및 협력의 동기가 확대되고 있음.
- 향후 미·중관계는 복잡한 모습과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교차하면서 경쟁, 갈등, 협력이 반복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부록〉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동성명

2011년 1월 19일, 워싱턴

1.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초대에 응하여 2011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후 주석은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였고, 이후 미국 의회 지도부와 접견하는 한편,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2. 양국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11월 중국 공식 방문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에 대하여 돌아보고, 21세기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미·중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애쓴다는 점을 거듭 표명하였으며, 이는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양측은 미·중 3대 공동성명이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다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이끌 것임을 재차 천명하였다. 양측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할 것을 재차 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09년 11월 《미·중연합성명》에서의 약속 사항을 거듭 강조하였다.
3. 미·중 양국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촉진하고 21세기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상호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기로 하였다. 양국은 현재 안보, 정치, 사회, 자원,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 영역에 대하여) 양측의 더욱더 깊은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양국의 지도자는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과 각국 국

민의 복지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세계의 동반자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더욱 광범위하고 깊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한다.

#### 미·중관계의 강화

4. 양국이 직면한 중대한 공동의 문제들을(common challenges)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공동의 우려를 해결하며,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미·중관계는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정치제도와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임에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 모범을 만들어냈다. 양측은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신뢰를 늘리고 심화시키는 데 한층 더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화를 심화시키고, 실무협조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고, 견해 차이의 해결, 공통 인식의 확대, 일련의 문제에서의 협조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sup>6)</sup>
5.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강대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이고, 국제적 사건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는 중국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재차 천명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로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양국 지도자는 협력과 노력을 통해 21세기에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

---

6) 미국 측: 양측은 실질적 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한 대화의 심화를 강조하였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분야의 해결, 공동 영역의 확대, 이슈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음을 단언하였다.

적이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6. 양측은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맞물려 있으며, 미국 측이 관련된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하고, 중국 측이 이 문제에서 가지는 태도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sup>7)</sup> 미·중 간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을 지킬 것을 표명하였다. 미국 측은 대만해협 양안의 《경제협력 기본협약》에 대해 갈채를 보냈고, 양안(중국과 대만) 간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하였다. 미국 측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고, 양안이 경제, 정치 등 기타 영역에서 대화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긍정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sup>8)</sup>
7. 양측은 비록 양국이 인권 문제에서 아직 중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양측이 모두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거듭 천명하였다. 미국 측은 인권과 민주를 신장시키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측은 어떠한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각국과 각국 국민은 모두 자신의 발전 노선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각국은 피차 선택한 발전 방식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 문제

---

7) 미국 측: 미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만관계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관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8) 미국 측: 미국은 경제, 정치, 기타 영역에서의 대화와 상호 교류를 늘리며, 더욱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기대한다.

상의 견해차를 해결하고, 국제 문건에 근거하여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며, 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 (2011년 5월 개최 예정) 에서 다음 차 미·중 인권 대화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8. 미국과 중국은 다음 차 인권 대화 이전에 법률전문가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의 법률 협의와 법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 역할의 강화에 대한 교류와 토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를 벌이고 있다.
9. 미·중 양국은 건전하고, 안정되며, 믿을 수 있는 양국 군사관계가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공유하는 비전, 즉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미·중관계에 대한 공통인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오해와 오독, 오판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며, 양국 군사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의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양측은 미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게이츠가 이번 달 초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미국 측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 참모장인 천빙더(陳炳德) 상장(上將)이 2011년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미·중 국방부 방위업무 협의, 국방부 업무회의, 해상군사안보협의기구가 미래에 양국 군사 대화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이허우(徐才厚) 상장이 미국 국방부 게이츠 장관과 양국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7항의 공통 인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10. 미국과 중국은 우주영역에 대한 대화와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미국 측은 2010년 큰 성과를 남겼던 미국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2011년 중국 측 대표단을 초청하여 NASA 본부와 기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양측은 투명하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우주 영역 실무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11. 《미·중과학기술협정》은 양국이 가장 일찍 서명한 협정 중 하나로, 양측은 협정의 골자 아래서 얻은 성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협정의 연장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 위생, 자원, 환경, 어업, 학생교류, 기술혁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12. 미·중 양측은 양국 법 집행 연락조직(JLG)의 협력이 반테러 등 많은 영역에서 법 집행상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얻은 성과를 환영한다. 양국은 쌍방과 기타 방법을 통해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 고위층 교류의 촉진

13. 양측은 강력한 미·중관계는 고위층 교류와 떨어질 수 없고, 밀접하고 빈번하며 심도 있는 대화가 양국관계 및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 정상은 2011년의 만남이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의 회의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측은 바이든 부통령의 2011년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 미국 측은 시진핑 부주석의 이후 방미를 환영한다.
14. 양측은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S&ED)가 양국 정부 사이의 매우 중요한 협조기구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2011년 5월 워싱턴에서 3차 대화를 열기로 하였다. 전략 및 경제 대화는 양국이 상호 신

뢰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2011년 봄 미국에서 열리는 제2차 미·중 인적교류 고위급회담과 2011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열리는 제22회 미·중 무역연합위원회(JCCT)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외교장관이 상호 방문과 회담 등의 방식을 통해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15. 양측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미국 상하원 간의 정례화된 교류를 포함한 양국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역적·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

16. 양측은 미·중 양국이 아태 지역과 기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익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긴박한 지역적·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 힘쓰고,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협력하며, 각국과 각국 국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폭력과 극단주의에 맞서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도구의 확산을 방지하며, 핵 안전을 강화하고, 전염성 질병과 기아를 퇴치하며, 심각한 빈곤을 없애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해적을 물리치고, 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초국적 범죄를 근절하며,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응하며, 공동의 이익을 촉진한다.
17.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핵확산과 핵 공포주의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를 확산시키지 않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은 《핵실험 전면금지 조약(CTBT)》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을 지지하고,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일찍이 “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조약”을 이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이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양국은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핵 안전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중국에 핵 안보 시범센터를 건립한다는 양해 비망록에 공식 서명하였다.

18.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에서 선언한 《9·19 공동성명》과 UN 안보리의 관련 결의 등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함께 인식하였다.<sup>9)</sup> 양국은 최근의 사태 진전이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 것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한다.<sup>10)</sup> 양측은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이 진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걸음<sup>11)</sup>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중 양측은 비핵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6자회담에서 선언한 《9·19 공동성명》에서 제정한 기타 약속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선언한 우라늄 농축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

---

9) 미국측: ‘6자회담(6 parties talk)’이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9·19 공동성명’으로만 표기

10) 미국측: 우려를 표시한다.

11) 미국측: 필수적인 단계(essential step)

다.<sup>12)</sup> 양측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및 관련 분야의 국제의무 및 약속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 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19.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는 확신을 국제 사회에 다시금 심어주기 위하여,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찾는 데 힘쓸 것을 거듭 강조한다. 양측은 이란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란 역시 해당 조약에 상응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UN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P5+1(안보리 5개국과 독일)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이란을 포함한 각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데에 힘쓸 것을 강조할 것이다.
20. 양측은 《수단평화협정》의 전면적이고 유효한 실시를 포함하여 남북 수단의 평화 진전을 전력으로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각측이 자유롭고, 공평하며, 투명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중 양국은 다르푸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해당 문제가 포괄적이며 적절한 해결책을 조속히 찾을 수 있게 하려면, 다르푸르 지역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모든 지역<sup>13)</sup>에서 지속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는 것은 미·중 양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21. 양측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태지역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고, 다자적 기구 및 기타 아태국가들과 함께 평화와 안정,

---

12) 미국측: 우려(concern)를 표명한다.

13) 미국측: 더 많은 지역(the wider region)

번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관계의 수립**

22.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상호존중하고, 함께 번영하는 경제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국과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의 지도자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대화 기제에 근거하고, 아래의 요소에 기반을 두어, 올해 5월 열릴 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 시기까지 한층 더 전면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동의하였다.
23.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의 활발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측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였다.
  - (1) 미국은 중기 연방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또한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에 경계를 유지할 것이다. 미 연방 준비위원회는 최근 미래 전망과 장기 목표 전달력의 명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이미 채택하였다.
  - (2) 중국은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서비스 부문의 개인투자를 촉진하고, 자원 분배 중에 시장이 더욱 큰 역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구조 개혁의 촉진을 고수하고,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증강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변환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 (3) 양측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것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24. 양측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전 세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재차 천명한다. 양측은 또한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호혜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양측의 무역과 투자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25. 양국의 지도자는 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부여된 권리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하개발회의가 되도록 빨리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원대하며, 포괄적이고 평등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양측 회담 대표들에게 지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양국은 회담의 완성을 위해 각 회담 대표의 참여도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에 동의하였다.<sup>14)</sup>
26. 양국의 지도자는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 실현의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최근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21차 미·중 무역위원회를 포함한 이 분야에서의 진전을 높게 평가하였다.
27. 중국 측은 각급 정부기관이 정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감사 진행과 법에 의거한 감사결과 공포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sup>15)</sup> 중국의 혁신 정책과 정부 구매에서의 우대제공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sup>16)</sup> 미국은

---

14) 미국 측: 양측은 회담의 완성을 위해 우리(양국) 대표단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고 확대되고 확장돼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15) 미국 측: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16) 미국 측: 중국은 혁신정책과 정부 구매에서의 우대 제공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이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최종회의 이전에 중앙 하위 기구들을 포함한 유력한 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

28. 양국 지도자들은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육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측의 양자투자협정(BIT)에 지속적으로 힘쓴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성공적인 양자투자협정이 앞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 양측 투자자들에게 투명도와 예측가능성을 증진함으로써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sup>17)</sup> 중국 측은 미·중 경제무역연합위원회(JCCT)를 통해 협력의 방식으로 중국 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신속하게 인정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 중국 측은 양국이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 관제체제 개혁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 개혁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동반자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29. 양측은 이번 방문에서 달성한 합의를 포함하여 양국의 상업·무역 관계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 한층 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업·무역관계가 경제적으로 호혜적이라는 점을 환영한다.
30. 양측은 지속적인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와 미·중 경제무역연합위원회 등 양측의 경제관계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sup>18)</sup>

---

17) 미국 측: 성공적인 양자투자협상이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양국의 투자자를 위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양자투자협상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18) 미국측: 양국은 곧 있을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와 미·중 경제무역연합위원회를 통해 양자 간의 경제 관계에서 공고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31. 양측은 기업이 양국의 기초시설(인프라) 건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32. 양측은 금융부문의 투자와 감독 영역에서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중한 감독과 국가적 안보 요구와 일치하는 상황에서의<sup>19)</sup> 금융 서비스와 초국적 유가증권 투자 영역<sup>20)</sup>의 확립을 위한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지지한다. 미국은 “정부후원기업(GSE)”이 그 재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과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33. 미·중 양국은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포함되는 화폐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거래에 폭넓게 사용되는 화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은 중국 측이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
34. 두 나라는 전 세계 금융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금융구조를 개혁하는데 힘쓰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IMF와 다자개발은행(MDBs)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실현하기 위해, 양측은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특히 극빈국에 대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자개발은행과 합작하여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발전, 지역일체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
35. 양측은 G20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모델을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고, 전 세계 경제의 회복을 공고히 하고, 과

---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19) 미국측: 신중하고(prudential) 국가적인 안보 요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0) 미국측: 포트폴리오 투자

도한 외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 G20 정상회의의 선언(서울선언)을 재차 강조한다. 양측은 G20이 국제 경제와 금융업무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고, G20 정상회담의 약속을 시행하고, 칸 정상회담에서 얻은 긍정적인 성과를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것을 확인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36. 양측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현재 중요한 양대 문제라고 인식한다.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에 동의하였고, 양국과 세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협조해 나아가며, 기존의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고, 시장 개방을 보장하며, 청정자원 영역에서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며, 첨단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37. 양측은 미·중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재생가능에너지 동반자 관계, 《미·중자원안보협력연합성명》, 미·중 에너지 협력의 발의 이래로 양국이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영역의 협력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석유와 천연가스(혈암가스 포함), 민간용 원자력,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첨단 바이오연료, 청정 석탄, 에너지 효율,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기술표준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38. 양측은 《미·중 에너지 및 환경 협력 10개년 계획(TYF)》이 2008년 발의된 이래로 얻은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은 계획

내에서 한층 더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물, 대기, 교통, 전기, 보호구역과 습지, 에너지 효율 등 우선적인 영역에 대한 활동계획을 시행하고, 정책 대화를 시행하며, 녹색협력동반자(에코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새로운 에코파트너십 계획 두 가지를 기쁘게 선포한다. 양측은 양국의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구 등이 10개년 계획에 참여하여 미·중 에너지환경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10개년 계획에 의거한 협력 사업과 활동이 2011년부터 시작된다는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였다.

39. 양측은 칸쿤 협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양측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sup>21)</sup> 칸쿤 협의의 시행과 올해 남아공 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포함한 《UN 기후변화협약》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인적 교류의 확대

40. 미·중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미·중 간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서 더욱 광범위하고 심화된 인적 교류의 확대를 일관적으로 지지해왔다. 양측은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에 만족을 표시했다. 중국은 미국관의 성공적인 전시에 대하여 미국 측에 축하를 표했다. 양측은 중국 성장(省長)과 미국 주지사 포럼을 수립하고, 성(省)과 시(市)의 자매결연 관계

21) 미국측: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과 같은 일련의 영역에서 양국 지방급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더욱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또한 특히 “중국으로 10만 명을 유학시키는 계획”을 통해, 양국 청년 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미국 측은 더욱 많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편의를 계속할 것이다. 양측은 미·중문화의 해 등 기타 활동의 시행에 대한 논의 등 광범위한 문화교류에 대하여 토론하는 데 동의한다. 양측은 앞으로 상호 관광과 이에 대한 편의 제공을 더욱 추진하기로 강조한다. 양측은 상술한 모든 활동이 이해와 상호 신뢰,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결론

41.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이 이번 방문 기간에 보여준 열정적인 환대에 감사한다. 미·중 양국 지도자는 이번 방문이 한층 더 양국관계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하며, 양측은 공동의 노력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국 지도자는 모두 미·중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다.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정세분석 2011-03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43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2월
발행일	2011년 2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